

지역 맞춤형 낙후지역 정책을 위한 지역 유형구분 및 특성 분석: 성장촉진지역 정책의 사례 연구*

이원호** · 안영진***

Regional Classification and Analysis for Promoting Area-specific Policy of Deprived Regions: A Case Study of the Growth Promotion Area Policy*

Lee, Won Ho** · Ahn, Young-Jin***

요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낙후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간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4개 지역(도시지역, 농산어촌,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통폐합하고, 그 중에서도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촉진 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성장촉진지역 육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 한 뒤, 지역 특성에 알맞은 차별화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기 선정된 70개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 맞춤형 낙후지역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장촉진지역은 공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어: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지역 유형 구분 및 특성 분석, 맞춤형 낙후지역정책

Abstract: In spite of arduous policy efforts to address the deprived region problem emerged in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cesses since the 1960s, it is well acknowledged that there are some policy limitations. In a recent effort to improve the policy for the deprived regions, the national territory is divided into 4 groups such as urban, rural, growth promotion, and special situation areas and various policies for the deprived regions have been consolidated into a policy for the growth promotion area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lassify the already-designated 70 growth promotion areas and examine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in order to propose more regionally situated policy approach to the deprived areas. The study shows that the types of the 70 growth promotion areas are much differentiated one another in terms of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It is therefore further argued that the policy efforts need to be area-specific in order to address the policy demand for the deprives regions in a more efficient way.

Key Words: deprived region, growth promotion area, regional classification and analysis, area-specific policy

1. 서론

지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압축적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과 몇몇 대도시 산업지역을 제외한 국토의 많은 지역들은 낙후와 정체를 겪어 왔다. 무엇보다도 특정 지역 중심의 공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 어촌 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유출이 이뤄져 왔으

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¹⁾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 생활 공간으로서의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들, 예컨대 대표적으로 오지개발, 도서개발, 개발 촉진지구, 접경지역, 신활력지역 사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김현호 등,

* 이 연구는 필자들이 수행한 “낙후지역 성장촉진을 위한 지역계획 개선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09)”의 일부 내용을 원용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wonholee@sungshin.ac.kr)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jahn@chonnam.ac.kr)

2005). 그러나 이들 정책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낙후지역 지원 프로그램의 부재,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정책추진,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효과성 저하, 사업추진 담당조직의 분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사업추진의 결여, 사업간 비연계성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의 적정성과 정책 추진의 한계를 비판받아 왔으며(이원호 등, 2006; 안영진, 2007), 아울러 일부 낙후지역의 저발전은 더욱 더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라는 국토 발전전략 아래 전 국토를 기초생활권과 광역경제권 그리고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고 개발 권역에 걸 맞는 정책목표와 수단을 새롭게 설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전국의 163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지역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간 통폐합을 행하고 포괄 보조금을 도입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초생활권 계획에서는 그 동안 중앙 정부의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낙후지역 지원사업(5개 부처, 15개 사업²⁾을 4개 지역(도시지역, 농산어촌,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별 포괄 보조사업으로 재편하되, 그 중에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신규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에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낙후지역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 중 시·군을 대상으로하여 연평균 인구

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지역발전위원회가 5년마다 종합 평가한 결과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30~40년 동안 시행되어온 우리나라 낙후지역 개발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로 인식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의 도입에 따라, 이들 성장촉진지역의 지역맞춤형 발전전략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지원제도에서는 낙후지역의 개발 수요와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동일한 낙후지역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각 지역의 인구와 경제 그리고 사회 특성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千篇일률적인 지원 수단을 추진해 왔으며, 따라서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다시 말해 낙후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입각한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시키는데 많은 한계를 노정시켜 왔다. 성장촉진지역 정책도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와 사회구조, 산업경제, 정주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하에 다각화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개별 성장촉진지역 간에 나타나고 있는 인구 및 사회변동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각 성장촉진지역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제 유형에 따라 상이한 인구 및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낙후지역 지원 수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Huovarua et al., 2001; Huggins, 2003; Boschma, 2004; OECD, 2009).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난 2009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8호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된 70개 성장촉진지역³⁾을 대상으로, 먼저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 연구는 유형 분류된 성장촉진지역의 지역 여건과 낙후실태 등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한다. 마

지막으로 이 연구는 성장축진지역 유형별로 특화된 발전방향과 개발전략을 탐색하고, 이와 관련한 특성화된 사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성장축진지역의 유형 구분

1) 유형화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성장축진지역에 대한 정책 시행과 사업 집행의 주된 목표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낙후의 원인과 침체 요인을 극복·해소함으로써 성장축진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에 관한 기존 정책 및 제도들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최소기준을 만족시키는 방안에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선정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기보다는 다소 획일적인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행 낙후지역 지원정책이 지역의 인구, 사회, 경제 등 낙후지역별 제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축진지역의 유형별 구분은 낙후지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정비의 측면과 낙후지역의 발전 내실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국토해양부, 2009).

먼저 성장축진지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정비 측면을 고려하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성장축진지역에 대한 총체적 지원 정책 및 제도의 마련,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성장축진지역별 차등적 정책 및 제도의 지원과 집행 체계의 구축, 기존 낙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 등에 의거하여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성장축진지역 발전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성장축진지역에 관한 자생적 발전모델의 설정,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성장축진지역에 관한 개발전략 및 사업계획의 수립, 지역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장축진지역 개발사업의 내실화의 추구 등이 요구된다(한국농촌공사, 2004; 한국토지공사, 2005; 이재준 등, 2008).

낙후지역인 성장축진지역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우선 특정 지역의 낙후가 단일한 문제에 기초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낙후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국토연구원, 1999; 건설교통부, 2005). 특히 종합적 시각 아래 전략적 관점에서 지역의 낙후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선행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의 핵심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 요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장축진지역의 유형구분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 인구 및 사회문화적 조건 그리고 지리적·공간 구조적 특성 등 주요 낙후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성장축진지역의 유형화

본 연구에서 성장축진지역의 유형화를 위해 요

표 1. 성장축진지역의 유형화를 위한 요인분석 변수 항목

변수명(기준 연도)	산출방법
인구밀도(2007년)	인구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비율
인구변화율(1997~2007년)	1997년~2007년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2007년)	해당년도 각 시·군부과세액=임대소득+이자소득+양도등개인소득+원천징수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일시재산+기타소득(단 농업소득세, 법인세할주민세는 제외)
재정력 지수(2007년)	낙후지역 시군별 재정력지수
지역접근성(2007년)	광역대도시와 해당 시·군간의 인구를 곱한 것을 양 지점간 거리와 접근소요 시간을 곱한 것으로 나눈 값

인 분석과 함께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에는 성장축진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성장축진지역 선정지표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성장축진지역의 낙후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 중 자료의 구득이 용이하며, 성장축진지역의 유형화를 위한 분석방법에 적절한 변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는데, 해당 변수는 성장축진지역 선정과 관련된 변수로 통계적으로 검증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표 1).

성장축진지역의 유형화를 위한 요인 분석 결과,

표 2. 각 요인에 대한 변수들의 요인 부하량

변 수	요인 1	요인 2
소득세할 주민세	0.737	0.359
재정력 지수	0.708	0.402
지역접근성	0.812	-0.293
인구밀도	0.106	0.813
인구변화율(1997~2007)	0.062	0.596

전국 70개 성장축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을 단위로 하여 선정 지표인 총 5개 변수를 대상으로 산출한 상관행렬을 바탕으로 하여 직교회전(Verimax 회전)의 방법을 통해 공통 요인을 구하면,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모두 2개로 나타났다. 이 2가지 요인 중 제1요인이 전체 변동의 40.4%를 설명하고, 제2요인이 21.8%의 설명량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두 요인을 모두 합친 누적 설명량은 전체의 62.2%에 이르러 도출된 요인들의 설명력이 충분함을 보여준다(표 2). 요인점수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살펴보면, 요인 1이 탁월한 지역은 지역 내 소득이 높고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나타낸다. 반면 요인 2가 탁월한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2).

성장축진지역의 유형구분을 위해 본 연구는 개별 단위 시·군의 요인점수를 토대로 하여 K-평

표 3. 군집별 시·군의 분포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요인 1	0.902	1.583	-0.637	-0.662
요인 2	0.980	-0.956	0.848	-0.698
시·군 분포 수	15	10	1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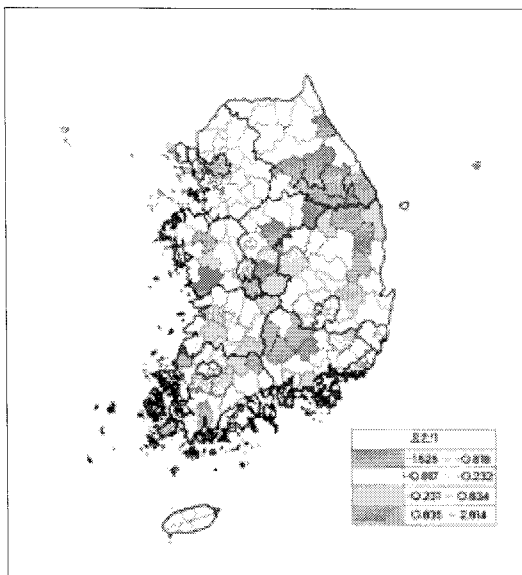


그림 1. 요인점수 1의 공간적 분포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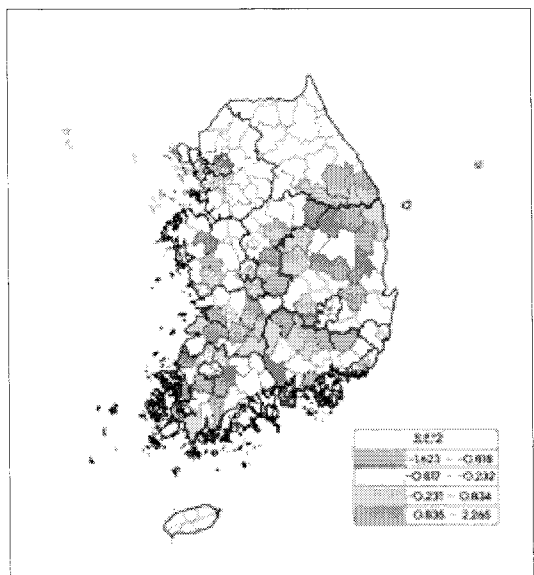


그림 2. 요인점수 2의 공간적 분포패턴

표 4. ANOVA 결과

구분	군집		오차		F	유의확률
	평균제곱	자유도	평균제곱	자유도		
요인 1	18.816	3	.190	66	98.931	.000
요인 2	16.479	3	.296	66	55.600	.000

표 5. 성장축진지역의 유형구분 결과

유형	낙후지역 분포
A형 (15개)	태백시, 옥천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영광군,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밀양시
B형 (10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C형 (17개)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성주군, 울릉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천군
D형 (28개)	청양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산청군, 함양군

군 집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군집중심 및 시·군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성장축진지역의 유형을 4개로 구분하였었다. 이때 유형별 요인점수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집단구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된다(표 4).

이에 따른 성장축진지역의 유형구분 결과는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형별 특징으로 보면, A유형은 여타 성장축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정기반이 우수하고 인구감소가 적은 지역(소득재정 고 - 인구감소 저)이며, B유형은 인구는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지만 소득과 재정

기반이 나은 지역(소득재정 고 - 인구감소 고)이다. 또한 C유형은 다른 성장축진지역에 비해 소득과 재정기반이 취약하지만, 인구감소가 덜 심한 지역(소득재정 저 - 인구감소 저)인 반면, D유형은 다른 성장축진지역에 비해 소득, 재정, 인구감소 등의 면에서 열악한 낙후성을 보이는 지역(소득재정 저, 인구감소 고)으로 나타났다.

3. 성장축진지역의 유형별 특성 비교 분석

본 장은 성장축진지역이 유형별 특성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고찰하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인구의 밀도 및 규모, 인구변동, 노령화지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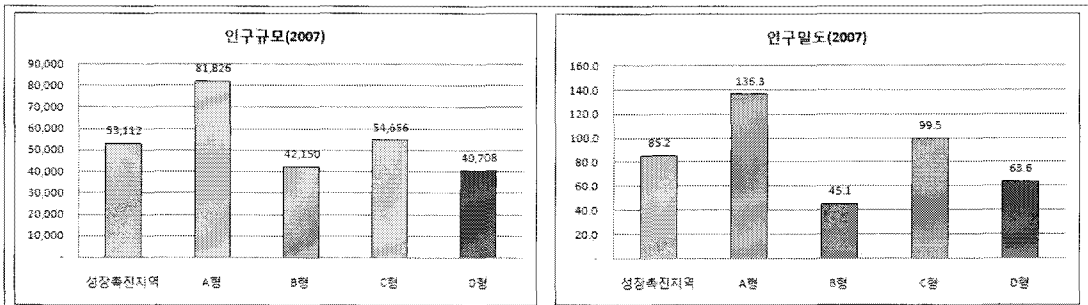


그림 3. 지역 유형별 인구 규모와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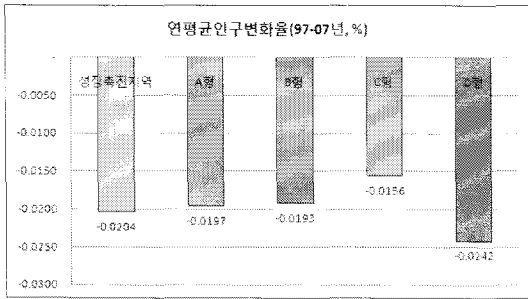


그림 4.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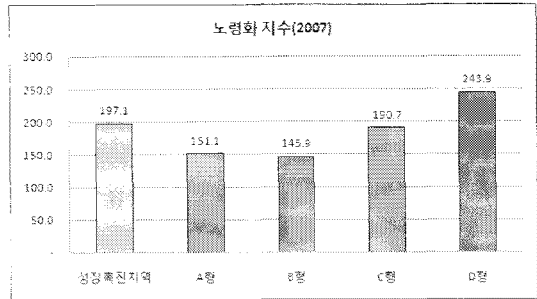


그림 5. 지역 유형별 노령화 지수

인구구조 측면에서 보면, 2007년 기준 성장촉진지역은 우리나라의 나머지 지역(비성장촉진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단위지역의 인구규모가 매우 작고 인구밀도도 대단히 낮은 실정이지만,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성장촉진지역의 인구규모에 있어서는 A유형 > C유형 > B유형 > D유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한편, 2007년 기준 인구밀도에 있어서는 A유형이 성장촉진지역 중에서 가장 높고, 뒤이어 C형과 D유형이 뒤따르며 그리고 B유형이 가장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밀도 측면에서 B유형이 대단히 취약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 지역의 인구구조를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의 인구 변화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97년~2007년 성장촉진지역의 유형별 인구 변화율도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C유형의 성장촉진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인구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뒤이어 B유형과 A유형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전형적인 낙후지역인 D유형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 0.024%의 인구 감소율을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성장촉진지역 중에서도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

노령화 지수는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이다. 2007년 기준 노령화 지수를 살펴보면 성장촉진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197.1로서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인구 감소의 공간적 패턴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지수의 공간적 패턴도 지역에 따라 상당히 차별적이며,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의 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가 노령화를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을 말해 준다. D유형이 가장 높은 243.9를 기록하고, 다음으로 C유형이 190.7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A유형은 151.1이며, B유형은 145.9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5).

다음으로 성장촉진지역의 유형별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한 지역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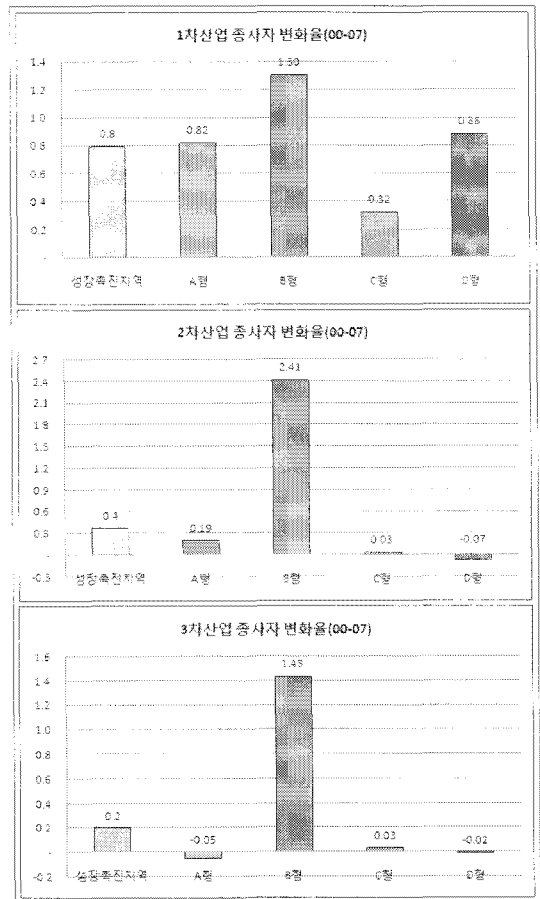


그림 6. 지역 유형별 산업별 종사자 변화율

지표로서는 산업별 종사자수와 그 변화를 들 수 있다. 2000년~2007년 기준 성장축진지역은 전반적으로 1차 산업의 종사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2차 산업의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3차 산업의 종사자수는 미약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장축진지역의 유형에 따른 차이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성장축진지역의 농림수산업 종사자수는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장축진지역 중 B유형의 1차 산업 종사자수의 증가세가 가장 뚜렷하며, 그 다음으로 D유형, A유형이 뒤따르고 있으며, C유형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그림 6). 한편 성장축진지역의 2차 산업 종사자수는 2000년~2007년 사이에 B유형에서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D유형은 감소세를 나타낸다. 아울러 3차 산업 종사자수는 지역경제의 잠재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 3차 산업은 2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B유형에서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A유형과 D유형에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발전 여건을 고찰하기 위해 성장축진지역의 재정 자립도와 지역 접근성을 고찰하였다. 2009년 기준 성장축진지역의 재정적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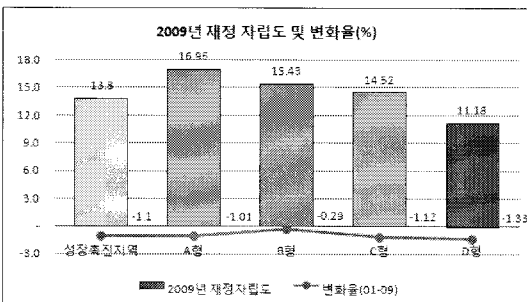


그림 7. 지역 유형별 재정 자립도와 변화율 (2001~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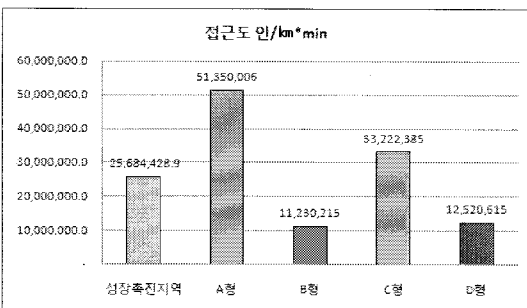


그림 8. 지역 유형별 접근도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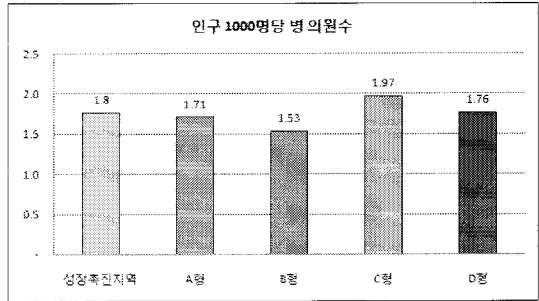


그림 9. 지역 유형별 인구 1,000명당 병의원수 (2007년)

립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A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D유형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7).

한편 2007년 기준 접근도는 성장축진지역 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성장축진지역 중 A유형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B유형과 D유형이 성장축진지역 평균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장축진지역의 유형별 정주환경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기초서비스 여건으로서 2007년 기준 성장축진지역의 인구 1,000명당 병·의원수⁴⁾를 조사해 보면, 배후 농촌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읍 등 농어촌 중심지의 병·의원수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 현상은 대도시권 이외의 소도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주변의 대도시권에 병·의원 서비스를 의존하기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가 적은 C유형이 1.97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반면, B유형은 1.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그림 9).

아울러 성장축진지역의 인구 10,000명당 문화공간 현황⁵⁾을 조사해 보면, B유형과 D유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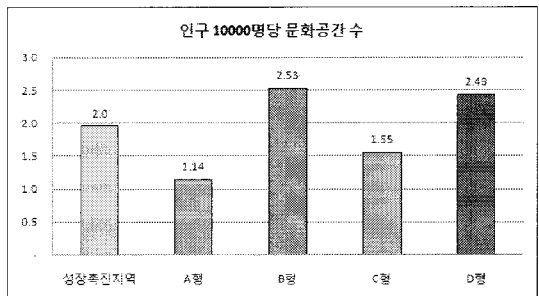


그림 10. 지역 유형별 인구 10,000명당 문화공간수 (2007년)

높게 나타나고 A유형과 C유형이 낮게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성장촉진지역의 유형별 공간분포 및 종합적 특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국토해양부, 2009). 먼저 A유형은 우리나라 성장촉진지역 중 상대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인구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시·군(8개 시부와 7개 군부)으로 파악된다. 지리적 분포 상으로 지방 대도시에 인접해 있거나 대도시권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도시로서 중위중심지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일정한 산업경제 활동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주변 배후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B유형은 우리나라 성장촉진지역 중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입지하고 있는 공간패턴을 보이고 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접하고 있는 낙후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력에 비하여 인구성장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주로 광업 등의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에서 관광 및 고랭지 농업 등 지역특화 농업을 위주로 구조전환 등을 추진하거나 모색하고 있는 지역들이 포함된다.

C유형은 우리나라 성장촉진지역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인구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기반이 크게 취약한 지역들로 재정 자립도 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군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과 경상남북도의 시·군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농어촌 특유의 문화와 경관 및 관광 등 비교적 우수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비교적 뛰어난 지역들이다.

끝으로 D유형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낙후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군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적 분포에서는 대체로 경상과 전라 등의 내륙지역 및 산간오지 그리고 일부 해안 원격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인구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대단히 취약하며,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크게 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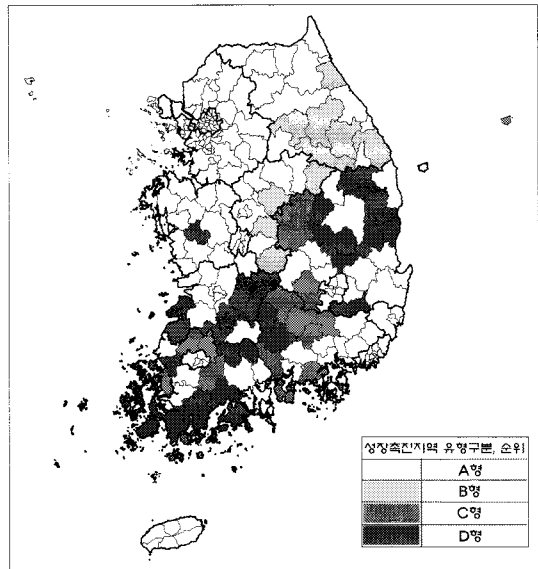


그림 11. 성장촉진지역의 유형별 공간분포

며,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아울러 대도시로의 접근성도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4. 지역맞춤형 낙후지역 정책을 위한 제언

1) 성장촉진지역 개발 방향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및 개발정책으로는 일반적으로 방어적 접근과 공세적 접근이 있지만, 우리나라 성장촉진지역의 실태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방어적 측면에서 '적정한 인구의 유지'가 관건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지역의 여건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증대,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장촉진지역의 지원 및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의 전략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성장촉진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개발추진 전략 및 과제는 크게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산업연구원, 200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먼저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프라 지원은 낙후지역 시군을

인근 대도시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간선도로와의 연결도로, 터널, 교량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도록 한다. 산지의 경우 읍·면간 연결도로 등을 확충하여 인구 유입과 이동을 촉진하고, 인근 도시의 편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도서지역에 대해 선 연육교·연도교의 건설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며, 도서 관광산업과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로 이외에도 산업단지, 상·하수도, 하천, 여항, 유통시설 등 지자체의 각종 기반시설 사업 수요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내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축진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사업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중앙 및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은 해당 시·군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구(one-source multi-use)하고, 특산물 재배 및 생산단지 등에 진입·연결도로·접안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통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고 지역 특화산업의 활성화에 기

여하도록 한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의 지원은 복합 레저단지, 관광지, 골프장, 온천, 휴양지 등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에 대해 연결도로 건설 등을 지원하여 낙후지역의 입지여건을 크게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 기숙형 특목고, 대안학교 등 새로운 인구 유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정비 및 건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환경 정비는 마을 재정비(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을 완비하여 기초생활 환경을 충족시킴), 주거환경 개선(노후 주택을 편리성과 자연경관 등을 고려하여 개량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마을 경관도 개선함), 커뮤니티 활성화(마을회관 등 공동 시설물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술·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함)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민의 이주·정착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과 인근 도시민의 휴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형 생태공원, 녹색수변 공간 등 조성, 전원마을, 동호인마을, 귀농마을, 은퇴자마을 등 테마형 마을과 독일마을, 프랑스마을 등 서구형 마을 조성, 기존의 읍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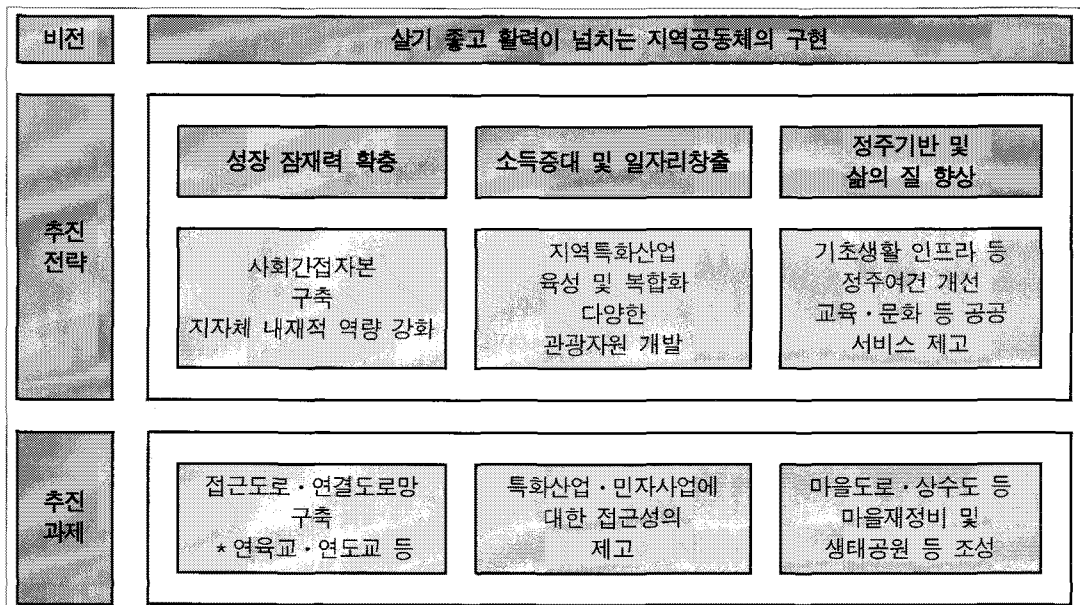


그림 12. 성장축진지역의 개발 비전 및 전략

문화·복지복합 센터, 온천 및 골프장 등 휴양·레저시설, 전원마을 등을 연계하여 자립형 생활권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성장축진지역 유형별 개발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성장축진지역 유형별 차별화된 개발 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 및 국내외 사례, 전문가 설문조사, 성장축진지역 유형별 종합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국토해양부, 2009).

유형별 발전전략 구상을 제시해 보면, 먼저 A유형은 성장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으로서 성장축진지역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변 배후지역에 대한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삶을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B유형은 인구정착 기반의 강화를 위해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추진하며, 이와 함께 귀농, 재이주 촉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C유형은 경제력 강화 및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복합화,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끝으로 D유형은 인구 및 경제 기반 모두에서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기반의 확립을 위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에 입각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공공 투자를 실천하도록 한다. 특히 대부분의 개발수요 영역에 대한 시책들이 필요하며, 생활환경 및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전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축진지역 유형별 추진 사업 패키지 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 먼저 A유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농수산업과 아울러 근대적인 산업에 기반을 둔 상대적으로 생활기반이 나은 지역으로, 도농 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공간적 격리를 극복할 수 있는 교통통신 및 정보 인프라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주변 배후지역에 대해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에 사업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지방 중소기업 및 특화기업의 입지 및 민자산업의 유치에 초점을 둔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서비스 시설의 확충과 녹색공간 및 친환경 시설 구축 그리고 도시민들의 이주 및 정착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아울러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다른 유형의 낙후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음으로 B유형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가진 농업 및 기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소득 및 고용기회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이를 활용한 어메니티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정주환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된 농업 및 기초 산업의 잠재력을 토대로 도농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귀농과 같이 지역 내 고부가가치 농업생산에 초점을 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복합 생활공간의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C유형에는 무엇보다도 기존 정주여건의 개선을 통해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고, 청정 거주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복지, 환경위생시설에 대한 투자와 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생활안전시설 개선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보전 및 문화재 보존 등 지역 내 어메니티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형 농산물 가공 등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도농 교류를 위한 채널 형성에 초점을 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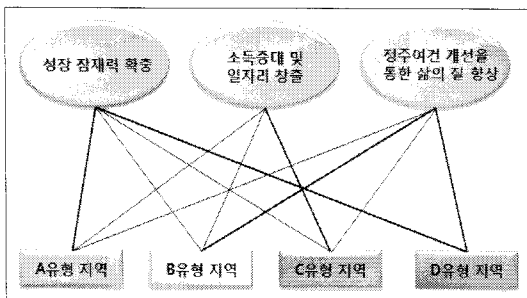


그림 13. 성장축진지역 유형별 개발모형의 설정

마지막으로 D유형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 서비스와 정주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주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되, 특히 여타 지역에 비해 떨어져 있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등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에 있어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의 선정 및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성장촉진지역의 유형화에 따른 접근이 정책 성공에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난 200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70개 성장촉진지역을 지표를 통해 유형화하고, 유형지역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유형지역별 맞춤형 정책방향과 수단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낙후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나,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에 2008년 2월 출범한 신정부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의 하나로 성장촉진지역을 설정하여 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난 2009년 6월 정부가 선정 발표한 70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였는데, 그 결과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A유형은 여타 성장촉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정기반이 우수하고 인구감소가 적은 지역이며, B유형은 인구는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지만 소득과 재정기반이 나은 지역이다. 또한 C유형은 다른 성장촉진지역에 비해 소득과 재정기반이 취약하지만, 인구감소가 덜 심한 지역인 반면, D유형은 다른 성장촉진지역에 비해 소득, 재정, 인구감소 등의 면에서 열악한 낙후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촉진지역의 유형별 지리적 분포 및 종합적

특성을 고찰해 본 결과, A유형은 성장촉진지역 중 상대적으로 지역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구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시·군을 포함하며, 지방 대도시에 인접해 있거나 대도시권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 중소도시로서 중위중심지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하고 있는 지역들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B유형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로 구성되고, 주로 강원도와 충북에 입지하는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주로 광업 등의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에서 관광 및 고랭지 농업 등 지역특화 농업을 위주로 구조전환 등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C유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인구기반을 갖춘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기반이 크게 취약한 지역들로 재정 자립도 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군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전남과 경상남북도의 시·군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끝으로 D유형은 전형적인 낙후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군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리적 분포에서는 대체로 경상과 전라 등의 내륙지역 및 산간오지 그리고 일부 해안 원격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인구나 경제적 기반 및 경쟁력에서도 대단히 취약하며,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성장촉진지역 개발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특성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연구는 성장촉진지역의 유형에 따른 특색 있는 지원사업을 구상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성장촉진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각 유형 지역별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A유형은 성장촉진지역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변 배후지역에 대한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삶을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B유형은 인구정착 기반의 강화를 위해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귀농, 재이주 촉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C유형은 경제력 강

화 및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복합화,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D유형은 인구 및 경제 기반 모두에서 매우 취약하므로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기반의 확립을 위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국가최소기준에 입각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공공 투자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한 성장촉진지역 육성은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 지수,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노령화 지수, 지역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낙후도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선정된 성장촉진지역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그에 따른 공간적 분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낙후지역 정책의 새로운 접근으로 등장한 성장촉진지역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유형 구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된 개발수요를 고려한 계획 및 사업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성장촉진지역의 개발수요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다각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주

- 1)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인구 감소 및 인구의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며, 다음으로 경제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성장 동력이 부재하고, 마지막으로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삶의 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다는 것이다.
- 2) 통합대상 사업은 5개 부처 15개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행안부 4개 사업(접경지역 지원, 도서지역 개발, 소도읍 육성, 살기좋은지역), 농식품부 6개 사업(신활력지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이촌종합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국토부 3개 사업(개발촉진지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산림청 1개사업(산촌생태마을 조성), 그리고 환경부 1개 사업(도서지역식수원 개발) 등이다.
- 3) 성장촉진지역 선정을 위해 우선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인구수준(인구밀도 + 연평균인

구변화율), 소득수준(소득세할 주민세), 재정상황(재정력지수), 지역접근성을 지표로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에 대해 상기 4가지 지표 값을 표준화(표준화 방식: $Z\text{-score} = (\text{해당 점수} - \text{평균}) \div \text{표준편차}$)하여 점수를 합산하였다. 특히 인구수준 및 소득수준을 주요 낙후지역 지표로 활용하는 EU등 해외사례, 전문가 AHP(전문가를 대상으로 낙후지역 지표의 중요도 조사)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인구와 소득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을 제외(균특법 개정에 따라 접경지역은 성장촉진지역과 중복지역이 불가능함)하고 종합지수(종합지수 $[Z] = [\text{인구밀도} + \text{인구변화율}] / 2 \times 2 + \text{소득} \times 2 + \text{재정력} + \text{지역접근성}$)의 합산 점수가 낮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70개 성장촉진지역은 다음과 같다.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5)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합 계	70개 시·군

- 4)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조산원, 약국 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 5)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상영관, 미술관, 화랑, 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문헌

- 건설교통부, 2005, 개발촉진지구 평가 및 선정지표 정비 관련 연구, 과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통합에 관한 기초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발간 연구자료, 서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낙후지역정책의 발전

- 방안, 서울.
- 국토연구원, 1999, 개발촉진지구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안양.
- 국토해양부, 2009, 낙후지역 성장촉진을 위한 지역계획 개선방안 연구, 비공개자료, 과천.
- 김현호·한표환, 2005, 낙후지역개발 사업의 조정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
- 산업연구원, 2005, 낙후지역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
- 안영진, 2007, 우리나라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평가와 발전과제, 지리학연구, 41(4), 412-434.
- 이원호·주성재·이재준, 2006, 우리나라 낙후지역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사례연구, 지리학연구, 40(1), 83-94.
- 이재준·이원호·이자원·이상도, 2008, 개발촉진지구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42(1), 67-78
- 한국농촌공사,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연구, 안양.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활용에 대한 연구, 서울.
- 한국토지공사, 2005, 지역발전 잠재력에 의한 지역분류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 활성화 방안, 성남.
- Boschma, R.A., 2004, Competitiveness of Regions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Regional Studies*, 38(9), 1001-1014.
- Huggins, R., 2003, Creating a UK Competitiveness Index: Regional and Local Benchmarking, *Regional Studies*, 37(1), 89-96.
- Huovaru, J., Aki, K. and Aku, A., 2001, *Constructing Index for Regional Competitiveness*, *Pellerv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No. 44*.
- OECD, 2009, *Rural Policy Review*, Chian, Policy Brief, March 2009.
- 교신 : 안영진,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yjahn@chonnam.ac.kr, 전화: 062-530-2686
Correspondence : Youn-Jin Ahn,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jahn@chonnam.ac.kr phone: (062) 530-2686
- (접수: 2010.11.22, 수정: 2010.12.17, 채택: 2011.1.5)